■ 김정일 카터 불러 놓고 전격 방중 왜

‘김정은 후계 승계’ 협의 가능성

내달 노동당 대표자 회의 물밑접촉 관측
6자회담 재개 관련 중요합의 나올 수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26일 ‘전격 방중’은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요동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지난 5월초 공식 방중한 지 넉달도 지나지 않아, 그것도 미국 전직대통령이 방북해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전격 방중길에 오른 것은 북한 내부에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는게 외교가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무엇보다도 외교소식통들은 이번 방중이 김 위원장의 후계구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이 평양에 와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급박하게 방중형식과 시기를 택한 것은 북한 지도체제와 관련한 특이사항이 아니고는 상상하기 어렵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선발대도 없고 아무런 사전징후도 없이 방중한 것은 후계구도와 같은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특히 9월 상순 조선노동당 대표자 일정과 긴밀히 연결돼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당 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으로의 후계구도를 안정화하려는 김 위원장으로서는 중국과 긴급하게 협의해야할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는게 소식통들의 시각이다.

이를 두고 중국 지도부가 현재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은으로의 승계에 대해 아직 동의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북한내 친중파들이 후계구도와 관련해 다른 목소리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북한 내부의 권력다툼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으로서는 중국 지도부와의 직접 담판을 통해 김정은으로의 후계구도를 ’확정’짓고 내부를 단속하기 위해 이번 방중을 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 목적이 북핵 6자회담 재개나 최근 심화하는 경제난과 관련돼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김 위원장이 미국 고위급 인사를 사실상 ‘초청’해 놓고 급작스럽게 방중길에 오를 정도로 긴박한 현안들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주목할 대목은 이번 방중이 목적과 관계없이 북·중 최고지도자간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운용과 관련한 새로운 틀의 밑그림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현재 중국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이 한반도 정세에 갖는 의미는 축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카터 전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지 못할 경우 ‘메신저’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단순히 곰즈씨를 석방하는 ‘구원투수’의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이번 방북의 목적과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판이 크게 뒤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나주서 남도 생태관광 지원네트워크 발대식

26일 나주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남도 생태관광 지원네트워크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지역민 등이 참석했으며, 지원네트워크 구축에 공공기관과 기업, 민간단체, 언론기관,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日 오자와 이치로 당대표 경선 출마 간 총리와 양자대결

일본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민주당 간사장이 26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탈(脫) 오자와 노선에 반발해 총리직이 걸린 당 대표 경선에 출마를 선언, 일본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이날 아침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와 회동한뒤 기자들에게 “하토야마 전 총리로부터 출마를 결단할 경우 전면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을 듣고 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토야마 전 총리도 오자와 전 간사장과의 회동뒤 기자들에게 당 대표 경선에서 오자와 전 간사장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이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다음달 14일로 예정된 민주당의 대표 경선은 간 총리와 오자와 전 간사장의 양자대결로 압축됐다. 간 총리는 오자와 전 간사장의 출마선언과 관련 “아주 잘된 것이다.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 (당 대표에) 재선되면 총리로서, 대표로서 목숨을 건다는 각오로 직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많은 대표 선거를 반복했지만 그것으로 분열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대표 경선 이후 당의 결속에 자신감을 보였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김효석 “대권주자들은 당대표 출마하지 말아야”

민주당 대표에 도전한 김효석 의원은 26일 “대권 주자가 당대표가 된다면 계파 간 갈등이 심해지고 민주당에 상처가 될 것”이라며 “대권주자는 당대표에 나설 때가 아니라 열심히 공부할 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광주지역 당원과 대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만들어서 정권을 재탈환해야 할 때”라며 “내가 당 대표가 돼서 대선주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명박 심판론과 야권단일화로는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와 싸우는 것은 기본이고 이에 더해 정책으로 준비된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9월 2일 오후 4시 광주서구문화센터에서 자서전(뉴민주당, 그 거대한 기쁨)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인영 민주 최고위원 출마

민주당 이인영 전 의원은 2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며 10·3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출마의 뜻을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민주진보세력의 맏형격인 민주당이 가장 큰 책임감을 느끼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민주당과 민주진보세력 모두 살 수 있다”면서 “특히 7·28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주었듯 광주·전남 민심은 ‘민주진보세력이 분열하지 말고 모두 힘을 합해 다음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하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이를 위해 ▲당내 ‘(가칭) 참 좋은 인재영입위원회’ 구성 ▲당내 ‘범야권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 의원은 이어 “민주당에 절실한 것은 역동적 리더십의 창출”이라며 “민주당의 전통과 연륜에 젊은 리더십과 진보정치노선이 합해진다면 민주당은 MB정권과 한나라당에 맞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보현 ‘정책네트워크’ 조례 발의

광주시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 구성이 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된다. 김보현 광주시의원(서구 2)은 25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30명 가량이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내용의 ‘시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정책네트워크는 각 상임위 소관의 분과 위원회와 운영위 소관의 의회제도개선분과 등 5개 분과로 운영된다. 김보현 의원은 “정책네트워크의 출범은 소통의 강화와 전문성의 제고라는 6대 시의회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첫걸음이며 정책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소극적 비판자를 넘어서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의회 상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일제 노무징용자 5,600명 사망 첫 확인

日 정부, 한국에 매장·화장 인허가증 넘겨줘

일제 강점기에 일본 기업 작업장과 탄광 등에 강제 징용돼 현지에서 사망한 일반인 노무 동원자 5600여명의 사망 기록이 일본 정부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달 초 한일강제병합 100년에 즈음해 ‘강제 징용자 유골 반환’ 등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한 간 나오토 총리의 담화 이후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협조 차원에서 해당 자료를 넘겨준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일반인 노무 징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거의 없었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오병주)는 최근 일본 외무성에서 일제하 노무동원자 5000여명의 사망 기록이 담긴 매·화장 인허가증을 넘겨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매·화장 인허가증은 사망자를 매장 또는 화장하기 전에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에게 사망자의 신원, 사망원인, 매·화장 방법 등을 신고하고 승인받을 때 발급받는 증서다. 사망자의 이름과 본적,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 기본 신상정보뿐 아니라 직업, 작업장명, 사망일시 및 원인, 장소, 매·화장 신청자의 이름, 주소까지 상세히 적혀 있다.

일본 47개 도도부현에 있는 1727개 지방자치단체 중 10개 도도부현 산하 82개 지자체로부터 수집한 것으로, 이 자료에 올라 있는 명단은 1930년대 말~1950년대 초 사망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일본에 강제징용돼 숨진 조선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담겨 있는 이 자료는 강제 징용, 현지 사망 사실을 입증하기 때문에 유족 확인이나 위로금 지급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또 동원 지역을 알 수 있어 강제동원 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등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일본 지자체는 문서 보관 기간을 20년으로 지정하고 있어 상당수 지자체는 기록을 이미 폐기했을 수 있지만 일부는 아직 문서를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 추가 기록 입수도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2006년 한일유골협의 때부터 20차례 넘게 ‘일본의 모든 지자체에서 이 기록을 수집해 일괄적으로 넘겨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한 끝에 일본 후생노동성이 모은 명단을 받았다. /연합뉴스